

〈특집〉

『서울대학교 法學』 50년의 회고: 법학교육과 법조

李 哉 協*

I. 서론

금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여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던 사법시험제도에 의한 법률가 양성제도는 일대 변혁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의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제도는 크고 작은 변화를 통해 발전해 왔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가장 혁신적인 개혁의 결정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지금까지의 법학교육의 외형적인 측면 뿐 아니라 교육내용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형시키고, 더 나아가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양성될 법률가들은 우리나라 법조의 지형을 바꿔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좁게는 동아시아 국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고,¹⁾ 넓게는 전지구적으로 유사한 변화가 발견된다는 것이다.²⁾

일부 학자들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보이는 법학교육의 질적 변화가 세계화 과정의 발로이며 날로 커져가는 미국법의 절대적 영향의 결과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법학교육 및 법률가 양성제도의 변화는 그러한 외부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인가? 우리의 풍토에서 우리 사정에 기한 우리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발로가 아니었던가? 이러한 의문이 법학지 논문들을 회고하며 든 생각이다.

한 사회의 제도는 수많은 내적, 외적 변수에 의해 만들어지고 변형되어진다. 무엇이 작금의 법학교육 개혁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사회사적, 지성사적 분석은 앞으로 좀 더 치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이러한 분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부교수.

1) Setsuo Miyazawa, Kay-Wah Chan, and Ilhyung Lee, "The Reform of Legal Education in East Asia", 4 *Annu. Rev. Law Soc. Sci.* 333 (2008).

2) R. Daniel Kelemen and Eric C. Sibbitt, "The Globalization of American Law", 58 *Int. Org.* 103 (2004).

에는 비단 법학지 논문 뿐 아니라 여타 학술지 및 단행본 저서에서 나타난 법학 교수 및 법실무가들의 단상들을 발굴하고 관련인물들을 직접 면접해 보는 경험적 자료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지난 50년간 법학지에 실린 법학교육과 법조에 관한 연구성과들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찾고자 한다.

지난 50년간 법학지에 실린 법학교육과 법조에 관한 글들은 모두 69편에 달한다. 유기천 교수(이하 존칭 생략)의 영문논문인 “Legal Education in Korea”(Ryu, 1964)가 그 첫 번째 글이며, 연도별 구분에 따르면 1980년 이전이 6편, 1980년대에 28편, 1990년대에 15편, 2000년 이후에 21편이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세계화’에 대한 담론이 시작되어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인 법학교육 개혁논의가 시작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발표된 글들이 24편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미 법학지에서는 외부적 환경변화에 관계없이 법학교육 및 법률가 양성제도에 대한 내생적인 고민을 오래전부터 해 오고 있었음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법학교육과 법조에 관한 주제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논의전개의 편의상 저자는 (i) 법학교육의 초기진단(5편), (ii) 법학교육과 법률가 선발제도(8편), (iii) 외국의 법학교육(9편), (iv) 법학교육 제도개혁(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21편), (v) 법률가 제도(13편), (vi) 법조사회학(10편)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렇게 볼 때 법학지는 우리나라의 법학교육 및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논의가 있을 때마다 늘 그 중심에서 서서 논쟁과 토론의 장을 제공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끊임없는 점진적 개선논의를 주도하여 왔으며 오늘날 법학전문대학원이 태동하기까지는 그러한 고민들이 점철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II. 법학교육

법학교육에 관해 1980년 이전에 법학지에 실린 글들은 <논문>이 아닌 <자료>, <Comment>, 및 <Book Review>의 형식으로 실렸다. 그 중에서 두 편은 학술회의 발표문으로 유기천이 영문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시기는 서울대학교에 사법대학원이 설립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유일한 대학원 과정의 전문법학교육이 실시되었던 때이기도 하다. 그런데 법학지에는 사법대학원에서의 교육방법 및 내용에 관한 글이 거의 실려 있지 않다. 아마도 당시에는 법학교육 자체를 다루는 주제

가 법학의 주된 연구대상으로 생각되지 않아서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 하지만 사법대학원은 오늘날 법학전문대학원의 모델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그 비교의 함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차제에 사법대학원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유기천의 두 글(“Legal Education in Korea”, 1964; “Legal Education in Far East”, 1965)은 사법대학원의 도입배경과 교육철학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에 의하면 사법대학원은 독일식 교육제도(하드웨어)와 영미식 교육제도(소프트웨어)의 장점만을 취하여 독특한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한 결과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기본적으로 일본을 통한 독일식 체제에 기반하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독일에서 법학부 입학에 위해 수료해야 하는 ‘짐나지움(Gymnasium)’의 교육수준이 우리의 학부교육에 버금가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식 체제를 계수한 우리나라에서 그에 상응하는 법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학부에서는 교양교육을, 대학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전문법학교육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³⁾ 또한 사법시험은 이러한 엄정한 대학원 수준의 법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입학시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유기천은 이 글에서 사법대학원이 교육 내용적으로 영미권 로스쿨의 사례분석법(case analysis)을 수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실세계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학제적 지식을 동원해야 함을 역설하는 등 지금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 많다.

사법대학원 시기(1962~1970)에 이루어진 한국법학교육에 대한 평가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1963년에 사법대학원에 방문교수로 왔던 제이 머피(Jay Murphy)의 실증연구이다. 그는 방문 이후 수년간 아시아 재단(Asia Foundation)의 후원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법과대학을 순방하면서 법학교수, 법률가들과 다각적인 면 접과 토의를 거쳐 자료를 수집하여 그 결과를 『개발도상국에서의 법학교육: 한국의 경험(Legal Education in a Developing Nation: The Korea Experience)』(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67)이라는 책으로 출판하였다(이 책에 대한 John Y. Lee의 서평은 법학지 제8권, 1966에 실렸다). 이 책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자면 방법론적 측면에서 엄밀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바 없지 않으나, 아마도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을 중심으로 한 최초의 집중적 실증연구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법과대학의 5년제 이상으로의 학제개편에 관한 최초의 논의는 유진오, “법과대학의 개편을 위한 시론”, **법정**, 1955년 3월호로부터 시작하였다고 일컬어진다.

또한 이 책의 발간 이후 국내에서 법학교육 내지는 사법시험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서울대학교에서도 1970년대 초에 법학교육의 개선을 위해 몇 차례 연구보고서(1971, 1974)가 발간되었으며, 1975년에는 법과대학 졸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법학교육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법학교육의 개선방향”(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5)이라는 제목으로 법학지에 발표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사정상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재양성(법조인, 행정부, 기업체의 법률전문가)을 책임져야 하는 법학교육의 다원적 목적을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특징으로 보고, 교육연한, 학과구성, 교과목, 국가고시(사법시험 및 행정고시)와의 관계 등을 살피고 있으며, 법과대학의 교육연한을 5년제로 늘리는 것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있다.

1970년 말에 서울대학교의 사법대학원이 폐지되고 사법연수원으로 그 기능이 옮겨가면서 점차 사법시험제도와 법학교육과의 괴리현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1980년대에 법학지에 실린 글들의 대부분은 사법시험 및 여타 국가고시제도와와의 관계 속에서 법학교육의 문제를 조망하고 있다. 당시 법과대학 4년제, 사법시험제도, 사법연수원제도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상황 하에서 이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기 시작한다. 법학사 혹은 대학 3년 이수 학력을 사법시험 응시자격으로 한다든지(가재환, “한국의 법학교육과 고시제도”, 1982; 강구진, “사법시험제도 및 새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대한 검토와 비판”, 1982), 국내외적으로 발전하는 법학의 추세를 감안하면서 동시에 법률가에게 필요한 기본적 법학지식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조정한다든지(최종고, “사법시험제도의 개선방안”, 1989), 적정 합격자의 수를 정함에 있어 법조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들이 그것이다(백형구, “사법시험제도의 개선방안”, 1989).

사법연수원에서의 법조실무교육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이론에 뒷받침된 실무의 연수, 즉 과거 사법대학원에 지향하였던 교양과 이론분야를 가미하여야 한다는 지적, 그리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에게도 그 연수과정에서 석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학과를 이수시킨 후에 석사학위를 수여케 하자는 주장이 있어왔다(이석선, “한국의 법조실무교육제도”, 1982). 송상현은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이 법학교육 및 법률가 양성에 있어서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각자의 기관이 각기의 업무범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교과과정과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법조실무교육제도재론”, 1982).

1970년부터 법과대학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법학교육의 개선방안은 1988년에 5년제 모델(예과 2년 + 본과 3년)로서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의 일부분으로 채택되기에 이른다.⁴⁾ 최대권은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다양한 세부 분야를 전공한 교수충원과 실험적인 사례중심 교수법의 도입으로 변모되기 시작했고, 또한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증대로 다수의 법과대학생들이 법조계로 진출하게 되면서 법률가 직업에서의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Legal Education in Korea: Problems and Reform Efforts”, 1988).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문민정부의 출현으로 법학교육 개혁논의를 본격화하게 만들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0여 년간에 걸쳐 세계경제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고 자유무역주의가 팽배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한국경제는 급속도로 세계화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었다. 아울러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사회 곳곳에서 변혁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1993년 말 사법부 주도로 사법제도개혁작업이 시작되었고(권성, “사법개혁의 방향과 문제점”, 1994), 그 일환으로 법조양성기관의 개편논의가 시작되어 법조교육의 일원화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등(김철수, “법조양성과 법학교육”, 1994) 법학지는 또 다시 한번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과연 법학교육이 교양교육을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교육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였다. 그런데 그러한 판단은 결국 법률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최대권, “학부교육과 법학교육”, 1996). 최대권은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한국에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가장 큰 정당화의 논거로 우리나라의 세계화에 따르는 사회적 수요와 산업화에 따른 각 분야에 걸친 법률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로 바라보고 있다(“How is Law School Justified in Korea?”, 2000). 세계화 과정에 따른 사회 각 분야에서의 전문법률가에 대한 수요의 증축, 그리고 세계화의 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제반 실증과학들을 법과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의 배양(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 방향”, 2004) 등은 이 시기의 법학교육 논의에 있어서 주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통상협상과정과 IMF 협상과정에서 겪었던 통상법전문가의 부족, 또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인수합병 전문변호사의 부재 등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면서 미국식 로스쿨 제도의

4) 법과대학이 ‘발전계획’의 차원에서 작성한 문서는 1985년, 1995년, 1998년, 2001년 모두 4차례이다(안경환, 2004, p.6).

도입이 거세게 일기 시작한다. 법학교육의 하드웨어적 개혁의 모델로서 (i) 4년제 법과대학만 유지, (ii)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되 종래의 4년제 법과대학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폐지, 혹은 (iii)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되 4년제 법과대학을 존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기 시작한다(정중섭,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논의의 의의와 방향”, 2004).

안경환(“21세기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2004)은 세계화 현상이 법치 내지 법의 지배원칙의 전면적 확산을 수반하게 되는데, 민주사법의 국가에서 국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로서의 법”, “서비스맨으로서의 변호사”와 같은 우리사회의 법률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함을 지적한다. 이를 위해 21세기 법학교육은 통합성, 다양성, 국제성, 전문성, 자율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21세기 한국법학의 지향 목표”, 2006). 송상현(“세계적 관점에서 본 법학교육의 추세와 법학전문대학원: 나라의 장래에 법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 2004)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새로운 교수요원의 양성을 강조하고, 교수의 본문과 사명, 역할 등을 서술한 업무지침서(faculty manual)를 마련해야 하며, 동일과목 교수들 간의 협업을 통해 교재, 강의내용, 범위, 수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점검과 의견교환을 정례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법학교육의 개혁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외국의 법학교육을 비교하고 이를 우리 상황에 접목해 보려는 노력이 많아지게 되었다. 법학지에서는 이미 1979년에 최병조가 <자료>의 형태로 독일의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서독의 법조인양성제도”, 1979). 안경환(“법과대학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영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1990)은 영국과 미국의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비교하면서 미국의 법과대학이 법을 사회개선의 실용적 수단으로 파악하는 철학적 배경 하에 ‘학문적 논리로서의 법(law in books)’을 ‘살아있는 법(law in action)’과 일치시킴에 적합한 방법론을 구상하였음을 주목하였다. 현실세계의 법적 문제를 다학문적(interdisciplinary) 접근방식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미국 법학교육의 경향은 John Haley에게서도(“Asian Legal Educa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 Comparative View”, 1993) 지적되었다.

법학교육개혁 논의과정에서 우리와 비슷한 지리적 여건 하에 있는 동아시아의 경험이 참조되었는데, 중국(曾憲義, “국제화시대에서의 중국법학교육”, 1993)과 일본(石井 紫, “국제화시대에서의 일본법학교육”, 1993)에 있어서도 국제화 진행에 따른 교과과정의 조정 등 우리와 유사한 문제의식들이 발견되었다. 송상현은

(“국제화시대에서의 한국법학교육”, 1993) 비교법적이고 국제적인 법학공부를 통해 기술적 통찰력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노련함을 갖춘 법률가를 키워낼 것을 주문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미국 제도를 모델로 삼게 되면서 미국의 법학교육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최대권(“미국의 학부교육 및 전문교육: 전문법학교육을 중심으로”, 1996)은 역사적 연원과 사회적 맥락 하에서 미국법학교육의 특징을 진단하였고, 최근에는 학생선발방법(이재협, “미국 로스쿨에서의 학생선발방법”, 2006), 임상법학교육(전해정, “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이론과 방법론”, 2008) 등 보다 세부적 주제의 분석이 진행되었다. Mathias Reimann(“Leg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in Germany: Lessons for Korea?”, 2000)은 현대의 독일에 있어서도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화의 영향이 교과과정에 미치고 있으며, Peter Gilles(“Zur neuesten deutschen Juristenausbildungsreform und ihren Bezügen zum Universitätsunterricht im Zivilverfahrensrecht”, 2004)도 독일의 최근 법학교육 개혁과정에서 보다 실무관련성이 증시되는 등 세계의 법학교육이 점차 수렴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법학교육의 소프트웨어적 측면, 즉 법학방법론, 교과과정, 교수법에 관한 글들도 법학지에 여러 차례 실렸지만 개혁의 제도적 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는 아니었다. 심헌섭(“법획득방법의 기본구조에서 본 법학과 법실무”, 1982)과 이시윤(“한국의 법학과 법률실무”, 1982)은 이 주제에 대한 초기의 저작물들이다. 전자가 ‘합리적 논의를 거쳐 얻어진 정당한 법적 판단이라는 견지에서의 법’에 대한 획득방법의 구조 속에서의 법방법론을 논한 것이라면 후자는 판례연구와 실천적 실익이 있는 주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판례연구의 강조, 미국 로스쿨의 사례식 방법(case method) 혹은 문제중심적 방법(problem method)의 도입은 교수법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제시되었다(양승규, “법학교육의 목표와 교수방법론”, 1992; 최송화, “법과대학의 학과체계와 교과과정의 재검토”, 1992).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는 보다 다양한 교육방법과 교과과목들이 제시되었는데, 독일식 사례교육, 임상법학교육, 엑스틴션, 모의재판, 법률정보검색 등이 그것이다(김영철, “법학교육에 있어서의 실무교육”, 2006). 특히 오수근(“문제중심 학습법을 활용한 법학교육: 모의수업의 내용과 관찰을 중심으로”, 2006)은 그동안 의과대학에서 활용되어 왔던 문제중심학습법을 실제로 모의수업에 적용하여 직접 관찰하였고, 참여 학생들과의 면접을 통해 그 효과를 평가해 보았던 실증사

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사법시험 체제에서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대학원 법학교육의 문제점과 체계적인 개선방안은 안경환(“대학원 법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책”, 1992)과 최대권(“대학원교육: 법학교육을 중심으로”, 2002)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의 법학교육은 전문적인 법학교육이라기보다는 교양법학의 측면이 강하고 대학원 교육은 학부에서 배운 것을 약간 심화시키는 교육이지 전문적인 학자로서의 교육이지 못해왔다는 반성 하에, 수준과 강도 높은 수업과 훈련을 통해 국내대학원에서 우수한 학자를 배출하여 학문의 대외종속성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그들의 문제의식을 읽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도 외형적으로는 미국의 로스쿨 모델을 도입하였지만 어디까지나 한국적 현실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여러모로 고민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과는 달리 법학 미수자와 기수자를 구별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학사관리 문제, 다양한 기금과 안정적 수입구조를 마련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재정자립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에의 국가보조 및 세제지원혜택의 필요성(김종철,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방안에 대한 소견”, 2006) 등이 한 예이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유능한 법률가를 배출하기 위한 실무훈련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법학전문대학원과 다양한 법률수요자 간의 협력 하에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서 제시되고 있다(김기창, “법학교육의 국제경쟁력 확보”, 2006).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지 못한 법학부의 존속여부 및 운영방안(이상수, “대학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2006)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 어떻게 여하히 유능한 법학자를 배출할 것인가(최병조, “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 방안”, 2006) 등의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III. 법조

우리나라에서 법조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법학교육과 연계한 논문이 대부분이고, 그 자체를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다룬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소위 ‘법조삼륜’ 즉 법원, 검찰, 변호사를 세 축으로 하는 법률가 집단은 매우 동질적이고 탄탄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온 배타적인 집단이다. 일단 이러한 집단을 상대로 실증적 자료 수집을 한다는 것이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대개

의 연구는 쉽게 접할 수 있는 통계수치를 사용하여 엄밀한 양적 방법론에 의하기보다는 연구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법조에 관해 법학지에 실렸던 글들의 절반 정도는 주로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외국의 법조에 대한 글들도 대개는 제도론적 차원에서의 비교에 국한되어 있다(Michael Moore, “The Contribution of Lawyers to the American Legislative Process, and Their Education for the Role”, 1984; 안경환, “영국법과 미국법의 비교연구(II): 법관”, 1991; 안경환, “영국법과 미국법의 비교연구(III): 변호사제도”, 1991).

황인철의 “한국의 변호사제도: 변호사법제를 중심으로”(1982)는 한국변호사제도의 연혁과 현행제도를 변호사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글이다. 그는 변호사 지위와 직무의 독립과 자유가 보장되고 변호사단체의 자율과 자치제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사법권의 독립과 법조문화의 발전을 위해 법조일원화와 법조인구가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이 300명으로 확대된 1981년 이후부터는 변호사의 직역확대, 변호사회의 독자성 보장 및 자치실현, 변호사 광고규제의 완화, 변호사 보수의 적정화 등(양승규, “변호사제도의 개선방안”, 1988) 현안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이에 덧붙여 2000년 이후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는 외국의 대형 로펌의 국내진출에 맞서 경쟁하기 위하여 공동법률사무소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박상근,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 중 공동법률사무소 제도개선안의 고찰”, 2004).

법관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법관의 관료화와 무절제한 상위지향성 및 시세적응성 등이 인사제도의 문제로 지적되었고, 법조일원제의 채택과 법관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로 임명할 것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안경환, “법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88). 그런데 안경환은 법관제도가 우리 사법문화의 토양 위에서 성립하고 그 문화의 풍향에 따라 운용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방안의 실현은 결국 우리 법조의 문화개혁적 자기성찰과 반성이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제도와 관련하여서도 검사의 관료화 및 검찰권의 비대강화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조직의 재조정, 검찰활동에 대한 시민통제, 검찰과 경찰의 관계재조정,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제한 등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제시되었다(신동운, “한국 검찰제도의 현황과 개선책”, 1988).

법학지는 1987년에 유사법률직역에 대한 학술회의 발표논문들을 게재하였는데, 여기서는 주로 전통적인 법률가로서의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각 직역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문제(양창수, “변리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987) 및 부동산관련과목의 교육 등 법학교육의 다양화 및 연계화의 논의(박세일, “공인중개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87)가 예로 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다변화, 복잡화되면서 전통적 변호사영역이었던 소송 이외의 다양한 방면의 법률수요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 대한 변호사의 진출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었다. 예컨대 조세 업무의 분야에서 세무사의 업무 내지는 세무대리활동이 급증하고 있고,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와의 사이에서 세무대리원화를 둘러싸고 논쟁이 전개되고 있지만, 변호사측에서는 본격적인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 그것이다(신동운, “세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87; 남궁호경, “공인회계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987).

사법서사제도에 관해서는 1967년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관으로 이루어진 연구(Jay Murphy · 이태로 · 이시윤 · 권태준 · Alberta Murphy · 백충현, 『Legal Profession in Korea: The Judicial Scrivener and Others』, 1967)가 최초인데, 이 책에서는 사법서사가 서민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문제 조력자이며 지방의 지식인의 하나로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지적되었다. 호문혁(“사법서사제도의 제문제”, 1987)은 사법서사와 변호사의 직역 충돌과 그 조정 문제가 결국 사법서사의 자질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아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보수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법과대학의 졸업생들도 이 방면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법률가의 숫자가 정원제 사법시험 제도를 통해 엄격히 제한되는 구조 하에서는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법률가의 적정수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적정수에 관한 논의는 엄밀한 방법에 의해 정확히 계산되어야 할 작업이지만, 계측에 있어서 동원되는 여러 가지 변수의 선택과 상이한 기본가정 때문에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둘러싸고도 연구자마다 제각각의 결과를 가지고 찬반론의 근거로 삼았던 사례가 있었던이 사회현상에 대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동원이 반드시 사회적 논쟁의 종결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흥미롭게도 법학지에는 우리나라 법률가의 적정수에 대한 시론적 계측이 시도된 바 있다.

심현섭(“법학교수적정수 소고”, 1988)은 법학교육의 충실을 위한 법학교수의 적정한 확충이 법조선진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고, 최소적 모델(현

재의 주어진 요인자체를 고정된 것으로 전제하여 법학교육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적정수)과 발전적 모델(제요인들에 대하여 보다 바람직한 상태로 전환을 전제한 뒤 그에 대한 적정수 책정)을 구분하였다. 결과적으로 최소적 모델에 따를 경우 1988년 당시 교수총수의 2배인 1,014명이 요구되고 발전적 모델에 의할 경우 교수총수의 3배인 1,500여 명이 필요할 것으로 계측하였다. 안경환(“적정 법관수 책정을 위한 소론”, 1988)은 법관의 적정수 책정을 위한 제 요인을 정성적 수요요인(사법부의 이상적 기능에 대한 관념 및 법관이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의 이상적 수준)과 정량적 수요요인(인구증가, 1인당 국민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들에 대한 단순화 및 지수설정 등에 근거하여 2000년의 적정 법관수를 2,300여 명으로 계측하였다.⁵⁾ 신동운(“법조선진화와 검찰인구”, 1988)은 검찰의 각종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검찰인력의 적정선을 각종 통계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후 1988년 당시의 수준으로도 2배의 검찰인력이 확보되어야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충실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정상적인 검찰업무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양승규(변호사의 적정수”, 1988)는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인구수를 주요 외국과 비교하고, 특히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사회경제적 여건이 대체로 비슷한 일본과 같이 적어도 변호사 1인당 인구수가 1만명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 수는 4,000명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법률가 집단에 대해 법학지에 실린 최초의 분석적 연구는 아마도 구한말 한국인이 주체적으로 서양법학을 계수하여 한국법학으로 소화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본 최종고의 “개화기의 법학교육과 한국법률가의 형성”(1981)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서울대 법대의 전신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법학교육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법관양성소의 구성과 교수진, 그리고 보성전문학교의 교강사진과 법학수준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그러한 한말법학을 수립한 초창기 한국법률가와 법학자들의 이력과 저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한국의 법조를 분석한 최초의 시도는 최대권의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론을 제창하면서”(1982)이다. 그는 법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가집단을 떠나서는 살아있는 법을 논할 수 없으며 반대로 법을 떠나서 법률가집단을 논할 수 없다는 법사회학적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우리나라 변호사제도의 존재근거와 그에 합당한 역할이라는 문제제기의

5) 2000년 기준 실제 법관수는 1,430명에 달하였다.

토대 하에 우리의 변호사제도를 분석하였고, 궁극적으로 좀 더 합리적인 변호사 제도는 어떠한 것일까를 이론적 차원에서 탐구하였다.

법사회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보다 본격적인 법조의 분석은 최대권의 “변화하는 법조의 세계: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2004)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1960년대부터 한국사회 전체의 거시적 사회변화의 지표를 배경으로 하여 한국 법조계의 변화와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특히 그는 한국의 법률가들이 지식으로는 법치주의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위해 유용하다는 명제에 동의하면서도, 정치적 편의주의와 법에 대한 혐오의 정서를 동시에 공유하는 등 일종의 문화지체적 현상을 보임을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법학교육의 기본적 성격과 틀은 우리 사회 자체의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매우 지체되어 왔다. 따라서 대학원 단계의 로스쿨 제안은 그러한 상황 인식의 자연적 대응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다시말해 사회일반의 변화가 법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법사회학적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법률가 집단의 연구는 세계화 연구와 접목하여 초국경적인 법률업무와 전세계적인 메가로폼의 출현을 주목하게 되었다. 즉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미국법이 국제거래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실무에서 영미권의 법률문화, 특히 로펌이 주도하는 법률서비스의 전문화와 기업화가 광범위하게 파급되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된 것이다. 문재완의 “법의 세계화와 영미 로펌의 세계 지배: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2002)는 세계화의 과정이 어떻게 법률시장을 변화시켰으며 소수의 영미 로펌이 전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것은 결국 법의 세계화란 통일화된 초국가적 법규범의 탄생이 아닌, 소수의 지배적 국가에 의한 주요 금융시장의 통제, 그리고 그러한 지방적(local) 법규범이 여타국가의 상업적 법률시스템으로의 침투하게 되는 것임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다.

IV.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50년간 법학지에 실린 법학교육과 법조에 대한 글들은 그 학문적 관심의 폭과 질적인 수준에서 매우 훌륭한 연구 성과물이라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발전과 개혁의 궤적을 형성한 역사적인 가치가 큰 자료이기도 하다. 근대한국을 형성한 중심에 서울법대가 있었다면 각각의 시대를 이끌어갈 법률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양성할 것인가의

고민을 누구보다도 일찍,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하였던 자취가 법학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혁신적 변모는 결코 외부적 요인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 아닌, 우리사회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취적으로 사유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했던 결과인 것이다.

지금까지 법학교육에 대한 논의가 주로 제도적 개혁의 측면에 집중되었다고 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현시점에 있어서는 구체적 법교육의 방법론적 논의, 즉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사법대학원의 경험은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앞으로 한국적 전문법학교육의 모델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학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는 과거 Jay Murphy가 수행한 것과 같은 실증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그와 같은 실제 현장조사에 바탕한 일차자료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법학교육 및 법률가 양성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그 요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법조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앞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학지에서 이론적 혹은 당위적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현안들 - 법률가 수의 확대, 법조직역의 확대, 법률서비스 시장을 통한 경쟁심화 등 - 이 머지않아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법률가 집단은 양적 팽창과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질적인 탈바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법현상, 특히 법률가 집단의 문제는 사회적 현상의 일부로서 사회과학적 방법에 의한 분석을 통해야만 보다 정확한 의미를 밝혀낼 수 있다. 앞으로 다양한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법조에 대한 실증연구가 법학지의 지면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 것을 기대해 본다.